

與 “실용 인사” vs 野 “민심 역주행”… 청문회 격돌 ‘예고’

6개 부처 개각… 상반된 여야 입장
국민의힘, 김승원·용혜인 자질 검증
용 후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야는 새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8월30일) 단행된 이 대통령의 2차 개각 인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재경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사업을 실행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실용적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추측 전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또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 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평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신히 청문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 비판 목소리에 대해 “지금은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각 참여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걸 전제한다”면서 장관직에 지명된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걸맞게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후보자들도 각자 포부를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1석 뿐인 상황이라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내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의원직을 승계받을 후순위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세 수위를 올리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면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 등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나머지 장관에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경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왼쪽 쟁건다더니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다. 그레놓고 정작 국민이 쫓아내려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 한미동맹을 다 부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관취소가 더 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재관취소용 개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올바르게 일할 사람들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관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김민석 체제 민주당, 첫 정기국회 ‘시험대’

주요 국정과제 입법 지원에 당력 집중
장관 청문회 등 여야 충돌 요소 산적

김민석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사업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 하락세로 접어든 정당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8·17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색하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 조사는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최근 6개월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친이재명(친명)계를 대표해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정일치’에 대한 기대감보다 부동산·중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이 더 컸던 것이 집권여당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모든 의원에 게 당직 등 임무를 부여하는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둔 31일에 자신이 발족한 ‘메가 텐(10)’ 기구의 회의를 연속 주재하며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에 고삐를 조였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필요 입법을 마련하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메가프로젝트는 영남, 호남 충청을 중심으로 돼 있는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반도체와 AI를 지방으로 내리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1년 동안 준비돼왔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의 모든 지방 성장 관련한 역량과 콘텐츠가 (특위에) 거의 결합이 돼 있다”며 “(메가프로젝트·지방 성장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후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

혁신추진단·개헌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1030 청년정책단·제2 광화당사 추진단, 불금정치 골목민생단·AI전환형 금융·중시·경제제도 개선 추진단·미·중·일 정당외교 추진단의 첫번째 회의까지 직접 챙기며 의원들에게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투구를 요청했다.

김민석 체제 앞에 놓인 ‘산’도 만만치 않다. 민생·경제 성과를 만들어 낼 시간은 촉박한데,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해 쟁점으로 번질 사안이 산적해 있다.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으며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박태홍 기자

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단계적 도입

사고당협부터 우선 적용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사고당협’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및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우려가 강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선출 방식의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 검토해 점진적·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해야 한다. 사고당협을 제외한 나머지 당협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고, 2028년 당협위원장 선출 전까지 당규를 개정해 당원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골자다.

이에 기존 당협위원장들은 9월 15일까지 당협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선출되는 기존 방식을 준용하기로 했다. 또 이날 최고위에서는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이날까지였던 점을 고려해, 정기 선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연장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조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당협위원장 직선제 실시 대상은 위원장직이 비어있는 ‘사고당협’ 34곳과 당원권·직무정지 당협 4곳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당협은 조직위원장 즉시 공개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자격 심사 후 유자격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 직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해당행위자에게는 감점이 주어진다.

또 공모 및 당무감사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감사에서 당원들의 당협위원장 평가 50%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해당행위자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기존 당협위원장 대상 정기 당무감사도 실시한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사고당협’ 등을 제외하고 정기 당무 감사를 실시해, 해당 감사에서 당원들의 당협위원장 평가 50%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해당행위자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 당무감사를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은 교체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위 평가 당협 역시 조강특위에서 후보자를 심사해 2인 이상일 경우 당원직선제로 선출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조직 운영 규정과 당무감사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 사무총장은 “지방조직 운영규정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8월 말의 경우 당원 선거인단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감사 규정은 당무감사 시 해당 지역 당원의 평가를 50% 반영하는 걸 의무화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당원직선제는 전면 시행이 아닌 2단계 점진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재차 말했다.

이날 안건은 지도부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및 당권파가 당의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협위원장 직선제 전면 실시가 보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백지화했다면 밌겠다고 볼 수 없지만 백지화가 아니기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